

# 국정원 국정조사 충돌에 심상찮은 정국... 민주 장외집회 나서나

황우여·김한길 여야 대표 회동 결국엔 '빈손'

## 민생법안 등 합의 내용 4월 국회 재확인 수준 그쳐 민주당 "여당은 약속대로 군말없이 국조에 응하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18일 조찬회담이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둘러싼 대립으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났다.

정치권에선 김 대표가 5·4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후 처음 이뤄진 양당 대표 회동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대 현안인 국정원 국조에 대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두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러닝법안과 여야 대선 공보공약 및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양당의 지난 4월

합의내용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친 것이라 평가가 일반적이다. 또 정당연립 구소 제도 개선을 위해서 양당 연구소장이 조속히 만나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도 사전에 양측에서 이미 의견조율을 마친 것이다. 때문에 이날 대표 회담에 대해 별다른 성과를 못 낸 사실상 '빈손 회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정원 국조 문제와 관련, 김 대표가 "여야가 이미 국정원 댓글 검출수사가 종료되는 즉시 국조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즉각적인 국조 이행을 여당에 촉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허니문이라고 얘기하는, 집권 초기의 여야 협력관계의

마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대표가 여권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해 여당 내부의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고만 대답했다. 두 대표는 1시간 15분가량의 회동 시간 대부분을 국정원 국조에 할애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주된 원인은 '검찰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

되면서 검찰 수사가 종료됐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매관공작'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황 대표의 비서실장인 이상규 의원은 "검찰조사가 끝나고 수사를 하기로 한 것은 맞다"면서도 "일부는 기소돼 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므로 국조 실시는 관련법에 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병헌 원내대표까지 가세해 국정조사를 압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와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당에 대해 "여야 합의대로 군말 없이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면서 "정권의 정통성까지 타격으로 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당 지도부의 태도는 그동안의 대응과는 달리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국정원 사건'에 대해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 있는 점과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을을 위한 정치'가 물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신중할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19일 긴급의총을 소집,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의원들 간에는 강경 주장과 신중 입장이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이번 주말에 장외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게 아닌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며 6월 임시국회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 '5·18 왜곡·편향 규탄 결의문' 채택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8일 인천에서 제172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왜곡·편향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동찬 광주5개구 의장단협의회장이 제출한 결의문에는 5·18에 대한 일부 종편 방송의 역사 왜곡 프로그램

방영과 인터넷사이트 '일베'의 악의적이고 도를 넘은 비방에 대해 정부의 강력 대처와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부정과 왜곡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일선 교육현장에서부터 철저한 민주, 인권, 역사교

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역사왜곡, 편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제도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안전행정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 수세 몰린 새누리 '색깔 공세'

여야, 국정원 선거개입 싸고 연일 난타전

## 민주당 "새누리 선거캠프 대책회의 열었다" 폭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난타전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추가 폭로를 하며 여권을 밀어붙였다.

전날 새누리당은 "김부겸이 민주당 공작정치 밑불"이라며 폭로로 맞불을 놓는가 하면 김진태 의원은 이번 사건 주임검사의 과거 학생운동권 전력을 들어 색깔론 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은 추가 폭로를 자제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반박에 집중했다. 또 이번 사건을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게 정치적 대가를 약속하고 합작한 '매관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미행·

감금 혐의에 대한 수사로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향 전환에는 이번 사안이 진실개입 양상의 폭로전으로 치달을 경우 자칫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전날 색깔론 시비의 여파는 이날까지 이어졌다. 김진태 의원이 전날 자신이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경력을 소개하며 "정권에 맞서 싸울 때 공부만 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헌신성을 문제 제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인신공격성 무례한 언사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확성운동 한 사람이 사회 부조리와 권력기관의 비리를 바로잡았는데, 대한민국 여당 국회의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감싸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역공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추가 폭로를 하며 주도권을 계속 행사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몸통 설의 당사자인) 권영세 주중대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국정원 댓글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 시간, 새누리당 선거캠프에서는 권영세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참석한 멤버들, (권 실장) 주재하면서 통화한 내용이 몸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포함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 4명 등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도 만지작거리며 압박을 더했다.

# 전두환, 잠 못드는 밤이 시작됐다

'전두환 추정법' 주내 상임위 상정... 여당에도 변화 기류

## 김덕중 국세청장, 전세 일가 세무조사 추궁에 "밝힐 수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정금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하 전두환 추정법)이 이번 주 내 국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 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18일 오전 BBS 박경수 의원의 질문에 "우선 여당의 기류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주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를 하게 된다"고 새누리당과 협상 상황을 전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 최고위원께서 입법의 필요성을 얘기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주는 첫 논의다. 아무래도 뜨거운 법안이고 첫 논의 보니 결론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날 안에 법사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새누리당의 소급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급법이 적용된 친일재산환수법, 성범죄자 신상공개법과 같이 '전두환 추정법' 역시 소급법 논란과는 관련이 먼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개별적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탈세혐의가 있다고 분석되는 경우에는 개별주체와 관계없이 원칙적인 세무검증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국세청의 통상적 업무"라며 "조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지 않는 것이 세정운영의 원칙"이라고 답했다.



###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 조이투어

JOY TOUR CO.,LTD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 7월 27일부터 매주 목·토 출발

## 무안공항출발 동방항공으로 떠나는 가족 휴향지 태국방콕으로 GOGO

ALL포함!! 출발일: 7/27, 8/1, 3, 8, 10, 15, 17

일석 1,100,000  
항공 1,150,000

###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 일본 규슈 온천 관광

ALL포함!!

|    |  |         |
|----|--|---------|
| 일석 | 규슈, 기타규슈, 히타, 아소 + 야마가세 펜션 온천즐거기 4일      | 349,000 |
| 항공 | 규슈, 기타규슈, 히타, 아소 + 전통료칸 야마가세 온천즐거기 4일    | 499,000 |
| 항공 |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텐보스 4일                     | 569,000 |
| 항공 | 규슈, 유후인, 벳부, 히타, 아소 + 전통료칸 야마가세 온천즐거기 3일 | 689,000 |

### 오사카&와카야마

ALL포함!!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등골온천 4일  
출발일 7/18 899,000

###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필리핀여행

7월 25일부터 무안(→)마닐라 직항 추항(매주목, 일요일 출발)

### 무안공항 출발 베트남 전세기

7/20, 7/24, 7/28, 8/01, 8/05, 8/09

|  |  |  |
|--|--|--|
| <h4>마닐라 3박4일(아발사 88온천)</h4> <p>일석 778,000~<br/>특급 858,000~</p> | <h4>마닐라 4박5일(아발사88온천디스커버리)</h4> <p>일석 868,000~<br/>특급 968,000~</p> | <h4>다낭+호이안+후에성</h4> <p>1,099,000~</p>                                    |
| <h4>마닐라/보라카이 3박 4일</h4> <p>일석 938,000~<br/>특급 1,038,000~</p>   | <h4>마닐라/보라카이 4박 5일</h4> <p>일석 1,038,000~<br/>특급 1,158,000~</p>     | <h4>다낭+호이안 (아일랜드호핑투어 +스노쿨링)</h4> <p>특급 1,149,000~<br/>초특급 1,299,000~</p> |
| <h4>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으로 떠나는</h4> <p>목단강 백두산 북극 용정 도문 4일 900,000</p>  |  | <h4>몽고메리C.C + 다낭C.C (추경기준)</h4> <p>특급 1,449,000~<br/>초특급 1,599,000~</p>  |

### 국내여행/섬여행

씨스타크루즈호 목포-제주(편도) 33,000

홍도, 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188,000~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388,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환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종다 2003-1호)  
\* 공동유치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상보험: 1억원, 국내항공 5천만원, 관광진흥법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지 기업업체 \* 예약시 계약서(회사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료, 각종 비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